

## 新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운영방향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상규 ([sanggyu@most.go.kr](mailto:sanggyu@most.go.kr))

우리나라는 2003년 현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다. 지난 40여 년간 세계에 유례없는 압축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대의 국가로 발돋움 하였다. PDP TV, TFT-LCD, 반도체(D램) 등 다수의 세계 1등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04년 2,542억불)이 남미 대륙 24개국의 수출규모(2003년 1,965억불)를 넘어서는 수출대국이다.

이러한 고속성장은 정부의 주도적인 경제발전 계획과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저리의 외자도입과 외국기술의 모방·개량에 힘입은 것으로, 추격형 발전전략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앞서 언급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후발국의 추격형 발전전략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도 찾아 볼 수 있다.

CDMA(1위), 자동차(5위), 메모리 반도체(1위) 등 몇몇 공정(생산)기술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IMD 경쟁력보고서에서 나타나듯(과학경쟁력 19위 등) 전반적

으로 원천기술 개발역량이 미흡한 실정이 Outlook Express.Ink 다. 또한, 2003년 현재 국가기술지도 99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최고수준(미국)에 비해 5.8년 뒤쳐지는 반면, 중국과의 차이는 2.1년에 불과하다. 이를 반증하듯, 특허료와 기술료의 지급은 날로 증가하여, '03년에는 기술무역수지가 24.2억불 적자를 기록하였다.

정부도 R&D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95년 1.9조원에서 '05년에는 7.8조원으로 네배나 늘렸으나 R&D 투자의 절대규모는 미국의1/18, 일본의 1/8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인력도 양적 측면에서 풍부하지만,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이라는 질적인 수요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04.11.) 영국의 The Times가 발표한 세계 대학순위에서 아시아 대학 8개가 50위 권에 진입했으나 한국 대학은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등 교육 경쟁력도 문제시 되는 등 극복해야 하는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림 1> 주요국의 인구 천명당 이공계 대학 졸업생('01, OECD)

(단위 : 명)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영 국
이공계전체	2.2	1.2	0.9	0.8	1.6
박사학위자	0.05	0.03	0.06	0.11	0.10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이상의 선진국가로 성장하려면, 시대적인 흐름을 인지하고 우리의 위치를 포지셔닝 하여 그에 맞는 성장전략을 도출해 내는 것이 시급한 일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적 흐름이란 1998년부터 OECD가 강조해 온 지식기반경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토지·노동·자본과 같은 유형적 요소가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였으나 이제는 지식·정보·기술·브랜드·경영능력 등의 무형적 요소가 경제발전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한 것이다. Standard & Poor's가 미국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82년 기업의 시장가치에서 무형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38%였으나, 2002년에는 80%에 이른다. 또한, 1995년 IBM은 장부가치가 2.3억 불인 Lotus를 35억 불에 인수하는 등 기술, 특히 등 무형자산가치의 중요성은 지식기반경제의 새로운 핵심요소로서 날로 부각되고 있다.

학자들은 지식기반경제가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선두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계속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수익을 장기간 향유하는 승자독식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원천기술개발과 시장표준 선점이 필수적이며, 핵심인재 확보와 지식창출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까지 불리었던 양적투입에 의한 추격형 성장은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듯 세계 각국도 첨단기술 확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과학기술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과학기술 선두국의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난 1999년 연방연구투자법을 제정하고 2010년까지 연방 R&D예산을 2배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학기술 정책처(OSTP)와 관리예산처(OMB)를 통해 국토안보,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 등 상위 6가지 우선순위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2006년 R&D예산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우선순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는 R&D 예산의 유연한 배분을 통해 연구성과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 최대 무역 흑자국이며, 전기·자동차 등 핵심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도 「지적재산입국」을 국가정책기조로 채택하고 '03년 총리가 본부장인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금년 1월에는 향후 일본을 먹여 살릴 꿈의 10대 기간기술을 발표하였다.

또한, EU는 회원국들의 GDP대비 R&D 투자가 2010년까지 3%가 되도록 권고하는 리스본 전략을 발표하는 등 여러 선진국들이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는 선진국만의 이슈가 아니다. 그 동안 후발국들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중국은 「科教興國」을 국가정책기조로 채택하여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미 세계 3번째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등 기초·군사·우주·거대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 수준에 이르렀으며 소위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R&D 기지”로 변모하고 있다. 세계 500대기업 R&D센터 중 100개 이상이 상하이에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산당 상무위원 9명이 모두 이공계 출신이고 세계 최대의 이공계 국비 유학생을 내보내는 등 이공계우대 분위기를 바탕으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과학기술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출범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면서, 국민과 외국의 관심이 고조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황우석 교수의 세계최초 인간 배아줄기세포 추출은 Science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되어 주목받은 바 있으며, 휴대인터넷 WiBro, 한국형 고속열차 등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물이 도출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흐름과 긍정적인 분위기를 살려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기술혁신을 국가전체차원에서 달성하는 국가기술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첨단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작년에 새롭게 개편된 과학기술행정체제는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고 과학기술과 관련된·산업·인력 등 미시경제의 질적 향상을 통해 거시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연구개발, 인력양성, 지역혁신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행정은 관련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에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지역균형 발전 등 국정 과제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부처간 중복투자와 정책적 혼란도 일부 발생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었으나 실효성 있는 조정수단이 미흡했고, 간사부처인 과학기술부가 연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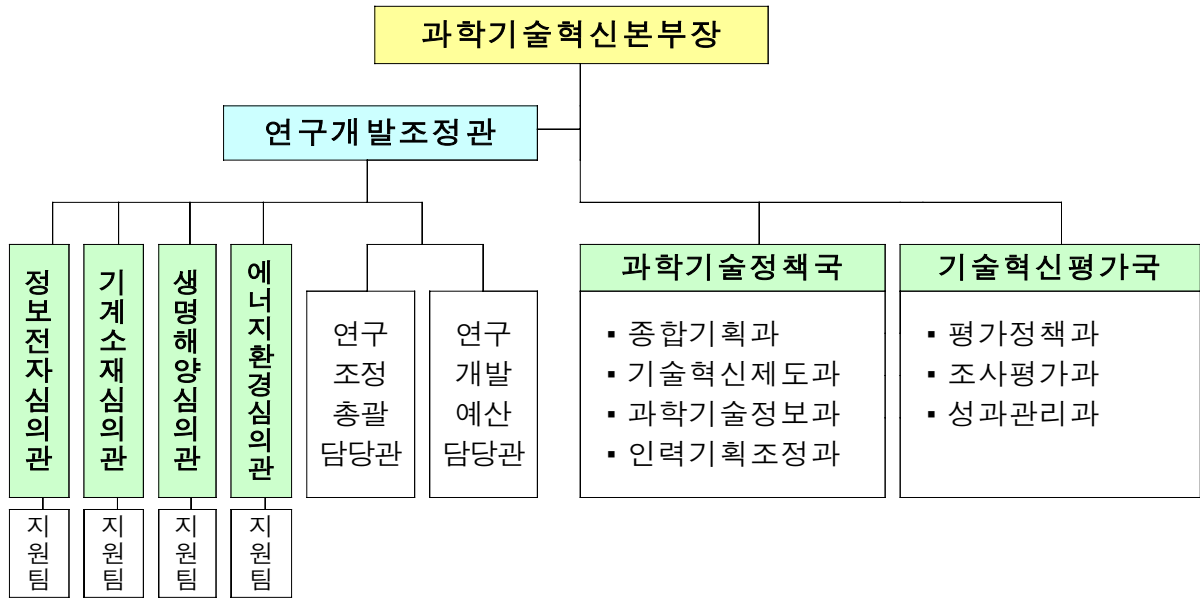
사업을 집행하는 여러 부처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조정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작년의 행정체제개편으로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서로서 과학기술정책을 국가목표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되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기술을 정부 정책의 중심에 놓고 과학기술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것이다.

과기부의 부총리 부서 승격과 함께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가장 큰 핵심내용은 단연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신설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거 개발연대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 산업·인력·지역 혁신정책을 종합조정하며, 국가 R&D 예산을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 목표에 맞게 조정·배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40여년간 유지되어온 과학기술행정체계를 혁명적으로 바꾼 것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혁신본부는 그 역할만큼이나 구성도 혁신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직은 본부장을 중심으로 1조정관, 4심의관, 2국으로 구성하였는데 각 분야에 대한 심의관(국장급)의 심층 심의를 통해 정책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총 106명의 인원은 과기부, 타부처, 민간 출신을 4 : 4 : 2 의 비율로 충원하고 국장급 6인을 전원 외부인사로 보임하여 혁신적인 인적 구성을 하였다. 2005년 2월말 현재 18개 부처 출신 공무원과 민간 출신 전문가로 103명으로 구성된 혁신본부는 의사(2명), 약사(2명), 변리사(2명), 벤처기업가 출신 등 다양한 경력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이 47%, 박사학위 소지자가 30%에 달하는 등 매우 우수한 인력을 자랑한다.



또한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새로 신설된 것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매월 4째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되는데 주로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현안과 쟁점을 신속하게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총 4회 개최되어 특허심사기간 단축, 신기술 인증제도 개선, 갈릴레오 프로젝트 참여 등이 토의·결정되었으며 상정 안건의 질과 위원의 참석률 등의 측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성과】**

-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실시해온 7개의 신기술 인증제도를 2개로 통합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제고와 기업의 편의성을 도모
  - ※ KT(과기부), NT, EM, EEC(이상 산자부), IT(정통부), ET(환경부), CT(건교부)를 신기술(NET)과 신제품(NEP)으로 통합
- 현재 22개월 걸리는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06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10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심사인력 248명을 증원하기로 협의하여 결정된 대로 구체화

과학기술 부총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혁신본부 등 새롭게 개편된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국가 전체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설정된 역점 과제를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우선,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新 행정체제의 3가지 기능(정책 조정기능, 조사·분석·평가기능, R&D 예산 배분기능)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본부는 새로운 기능인 정책조정

기능을 통해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조정하게 되는데 특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부처간 토의·조정 채널 역할로 활용되게 된다.

효율적인 정책조정을 위해서는 전 부처의 R&D사업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분석·평가 기능도 강화 될 것이다. 그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해당 부처별로 과제(Project) 중심으로 수행해왔다. 사업(Program) 차원의 평가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해 왔으나 제한된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심층평가에 애로가 있었다. 또한 성과중심의 평가지표가 개발되지 않아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고 행정부담이 과중된 부분도 있었다. 앞으로 금년 중 현재 추진 중인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이 제정되어 국가 연구개발 활동의 평가체제가 성과 중심으로 혁신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국과위에서 3년 내외 주기로 심층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조정과 배분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아울러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도 성과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가항목 중 성과관련 지표의 비중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R&D 예산의 배분 기능도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을 국가 발전목표와 전략 기술분야를 감안하여 배분·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그 동안 정부 각 부처가 부처 차원의 목표와 전략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왔기 때문에 부처간 R&D투자가 중복되고 국가 전략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을 계기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R&D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배분토록 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국가 발전전략과 R&D예산이 연계되고 부처간 중복투자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민·관 합동의 「연구개발투자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중장기 연구개발투자전략을 범국가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며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관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핵심기술 분야별로 상시적인 분석·검토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전에는 기획예산처가 모든 예산을 조정·배분하여 왔으나 이제부터는 국과위가 R&D예산 총액규모 범위 내에서 국가 전략목표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의 R&D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부처가 작성한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국과위가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한 후 예산을 조정·배분하게 된다.

**【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예산 편성방식 】**

- 국가연구개발예산 편성의 전문성 제고와 전략적 투자 강화를 위해 국과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조정·배분권 부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 기획예산처는 국과위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 (과학기술기본법 제21조)
  - R&D예산 총액규모는 국과위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결정
    - 총액 규모 내에서 부처별 지출한도 및 사업별 예산 조정을 국과위가 수행
- <국과위의 R&D 예산편성방식 개선내용>

개편항목	혁신본부 출범이전	혁신본부 출범이후
R&D 예산조정	R&D사업에 대한 평가 및 사전 조정 후 예산처에 의견 제시	R&D사업의 평가 및 예산 조정·배분 확정 후 예산처의 예산편성시 반영
R&D 지출한도설정	예산처가 총액규모 설정, 국과위는 부처별 지출한도 의견을 예산처에 제시	국과위와 예산처가 공동으로 총액규모 설정, 국과위는 부처별 지출한도 결정 후 각 부처와 예산처에 통보
중점 투자방향	국과위에서 작성 후 예산처에 의견제시	국과위에서 결정 후 각부처 예산(안) 제출시 반영
R&D예산심의 조직체계	민간중심의 한시적인 위원회 구성	혁신본부 심의관과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상시 검토체제 구축
계획서 제출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계획서 제출 (2월말)	중기사업계획서 제출(1월말)
성과평가와 예산연계	성과평과결과에 예산반영 미흡	성과평과결과에 따른 예산 조정·배분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 할 미래성장동력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이 바로 그러한 노력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통해 그 동안 조기에 시장진입이 가능한 10개 분야의 39개 제품기술개발을 위한 범 부처적 협조체제를 가동해 왔다. '04년 8월 부처별로 사업공고와 과제선정 등을 완료하고, 현재 기술개발 실행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본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별로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상위조정기구를 설치(차세대 성장동력 특별위원회)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사업단 별로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내용과 연구비 규모를 조정하는 등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사업단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단장이 해당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 】		
사 업 (주관부처)	제 품	기 술
디지털 TV/방송 (정보통신부)	• DTV 수상기, DMB	• 데이터 방송 등 15개 기술
디스플레이 (산업자원부)	• OLED, LCD, PDP	• TFT-LCD 등 5개 기술
지능형 로봇 (산업자원부)	• 자동차 제조용 로봇 등 4개 제품	• 지능로봇 시스템 등 8개 기술
미래형 자동차 (산업자원부)	• 지능형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 샤시제어 등 3개 기술
차세대 반도체 (산업자원부)	• SoC 등 6개 제품	• 나노신소자 등 13개 기술
차세대 이동통신 (정보통신부)	• 휴대 단말기 등 5개 제품	• 다중모드 등 18개 기술
지능형 홈네트워크 (정보통신부)	• 홈플랫폼 등 4개 제품	• 차세대 인터넷 서버 등 25개 기술
디지털콘텐츠 /SW솔루션 (정보통신부)	• 응용소프트웨어 등 6개 제품	• e-러닝 플랫폼 등 30개 기술
차세대 전지 (산업자원부)	• 이차전지, 휴대·가정· 상업용 연료전지	• 리튬이차 전지 등 13개 기술
바이오 신약/장기 (과학기술부)	• 약물전달시스템 등 5개 제품	• 약물방출제어 등 22개 기술
계	39개 제품	152개 기술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함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이 있다. 정부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장기간 동안 대규모의 정부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자기부상열차 시제품, LPG버스 엔진기술개발, 광우병 내성소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거양된 바 있다. 그러나 수요부처와 지자체의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일부 실용화 지연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되고 국내외 기술이전과 수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의 쏠단 계에 걸친 국가 총력 지원체제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하였기 때문에 혁신본부가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전략을 총괄 조정할 것이며 새로이 신설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실용화 대상과제 선정과 소관부처(기술수요부처) 지정



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과제별 특성에 따라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용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용화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검토대상 사업 】**

**유형 1 : 기술개발이 완료된 실용화 추진과제**

과제명	과제 개요
▪ 자기부상열차	· 실용화를 위한 추가연구개발 수행중 - 4년간 4,500억원 소요 예상
▪ 한국형 고속철도	· 고속열차 개발차량 안정성과 신뢰도 검증 - 3년간 800억원 소요 예상
▪ 저공해 LPG버스	· 저공해 LPG버스 상용화 - 4년간 250억원 소요 예상

**유형 2 : 기술개발 완료단계의 실용화 미추진 과제**

과제명	과제 개요
▪ 복합양전자 단층촬영기	· 뇌질환연구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진단장비 개발 - 5년간 1,799억원 소요 예상
▪ 소형열병합발전용 가스터빈	· 5MW급 열병합 발전용 소형 가스터빈 개발 - 5년간 1,500억원 소요 예상
▪ 대형 위그선 (초고속해상운송선)	· 항만과 공항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운송선 개발 - 5년간 1,200억원 소요 예상
▪ 해수담수화용 일체형 원자로(SMART)	· SMART실증로 건설과 해수담수플랜트 수출 - 6년간 4,388억원 소요 예상
▪ 나노공정 반도체 제조장비	· 중성자 빔을 이용한 나노공정 반도체장비 개발 - 5년간 600억원 소요예상
▪ 뇌질환 치매 치료 약물 AAD-2004	·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AAD-2004의 전임상·임상실시 - 3년간 200억원 소요예상
▪ 소형항공기개발	· 국내에서 개발된 4인승 소형항공기의 실용화 - 4년간 960억원 소요예상

※ SMART : System 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이다. 그 동안 대학의 인력양성기능이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인력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 이공계 교육의 질적인 저하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분야의 박사급 인력은 '07년 7천명, '10년 1만여명 부족이 예상되는 등 우수한 이공계 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제는 혁신본부가 중심이 되어 기술개발동향 등과 연계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토대로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시스템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확립함으로써 차세대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산업별 협의체(Sector Council)를 구성·운영하여 부문별 인력 수급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5년 단위의 「이공계 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우수 이공계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성과에 부합하는 보상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공계 석·박사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며 학제간 융합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 이공계 연구인력에 대한 경제·사회적 보상을 확대하고, 여성 과학기술인력 채용 목표제와 과학영재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인력양성 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일도 혁신본부가 힘쓰고 있는 과제이다.

전체 사업체의 98%가 넘는 중소기업 중 R&D 수행업체 비율은 4.2%에 불과하다. 또한, 수도권과 대전에 연구개발비의 77.8%, 연구원의 67.3%가 집중되어 있어 중소·벤처기업과 지방의 체계적인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코자, 혁신본부는 자생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방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 합동의 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제품개발비용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정부투자기관 대상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또 정부 R&D예산의 지방지원 비율을 '04년 32%에서 '07년 40%까지 확대하고 지역연구개발클러스터 육성, 지방연구중심대학 지정, 지자체 연구소 설립·운영 등을 중점 지원하여 지역별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토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혁신본부가 추진할 중점과제는 범국민적 과학문화의 확산이다. 「과학기술적 사고」의 확산을 통해 합리·효율·창의를 추구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정부 정책과 성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구는 30%('04년) 수준으로 미국의 48%('01년)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전 국민이 과학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혁신본부는 이를 위해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게 자주 접하도록 다양한 행사와 생활속의 과학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작년에 시작된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등 민간 주도의 과학문화 확산 활동을 활성화하고 과학만화·소설·수기·TV 드라마 등 대중친화적 콘텐츠의 개발·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우주인 선발, 물리의 해 행사 등 국민적 관심 유발 효과가 큰 과학이벤트를 발굴·추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시책과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대한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 등의 언론 대담, 토론, 인터뷰, 기고 등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연구현장의 체험학습장화를 추진하는 등 정부 시책과 출연연구기관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나갈 것이다.

혁신본부가 이 같은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본부의 노력만가지고는 부족하다. 여러 부처의 협조와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관심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운영해 나갈 혁신본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